

부영골프장 '특혜 요구' 담겨 협약서 공개 못하나

부영주택·전남도·나주시 2019년 한전공대 부지 기부 관련 3자 협의 광주고법 '특혜 의혹 잇단 제기 등 논란 종지부 위해 협약서 공개해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9년 말 전남도와 부영그룹이 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지 개발과 관련해 모종의 협의를 가졌던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해 '시민단체에 3자 합의서(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거듭된 판단에도 3자 협약서 공개를 꺼리는 것이 2019년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과 윤병태 당시 전남도 정부부지사의 대면 협의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광주경찰청이 전남지사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한전공대로 증여한다는 사실 자체는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향후 행정처리에 대한 국민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용했다. 나주시는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부영골

프장 부지 35만여㎡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 뒤 부영주택에서 아파트 5300여 세대를 짓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광주경찰청 등은 "자연녹지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단계 중 상향하는 것은 부영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며 "기부를 대가로 회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협약서에 담긴 것 아니냐"며 협약서 공개를 요구해왔다.

광주경찰청은 2021년 전남도와 나주시를 상대로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3자간 맺은 합의서(협약서)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3자간 맺은 부속 합의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3자간 협약서는 공개해라"고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3자간 부속합의서 공개 요구"는 "(문서) 존재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3자 협약서는 총 4개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제1항은 부영주택이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한전공대 부지로 증여한다는 것으로 증여 자체가 영업비밀이 아니고, 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므로 영업 비밀로도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제3, 4항 역시 원론적, 추상적 협약 이행에 관한 내용으로 영업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2항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재판부는 짚었다. 재판부는 "합의서 제2항은 골프장 부지 증여 이후 남은 부지(잔여지)와 관련해 피고(양 지자체)들의 법적 절차에 따른 지원을 추상적으로 기재하고 있다"면서 "만일 위와 같은 지원 문구(2항)가 한전공대 부지 증여자인 부영주택에 대한 도의적, 추상적 행정 협조 의무를 기재한 주의적 문구에 불과하다면 피고들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투명한 행정처리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추상적인(제2항) 행정 지원 문구가 제1항(부지 증여) 문구와 결합해 사실상의 기부 대가 내지 보상으로 구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영주택이 잔여지에 추진 중인 토지 용도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그 규모가 상당하고, 나주시 전체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등을 감안하면 협약서 일체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되레 논란을 막을 수 있

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전남도와 나주시는 "3자 합의서를 공개하라"는 1심 판단에 불복,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가 특혜 논란 가능성을 짚은 3자 합의서 제2항이 2019년 12월 15일 부영그룹 본사에서 가진 이종근 회장과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의 협의 내용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시 이 회장은 한전공대 설립 절차를 위해 학교 부지 기증 절차를 이행해달라는 윤 부지사 등 전남도·나주시 관계자 요청을 받은 자리에서 "출연 증서는 2019년 12월 16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또한 (잔여부지) 용적률에 대해서는 "175%는 아파트에만 적용하고, 녹지 공간까지 포함할 경우 18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안용)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도와 나주시 관계자는 "제안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논의 자리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광주일보에 "구체적 면담 내용 공개는 어렵다"면서도 "골프장 잔여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이종근 회장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이상으로 구체적이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라임·옵티머스 사태 수임·금품수수 의혹

검찰, 김오수 전 총장 수사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시절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뇌물성 금품을 받았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12일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5월 김 전 총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총장이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 사건을 수임했고, 고문료 명목으로 1억92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단체 주장이다.

이 단체는 김 전 총장이 차관 재임 중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하고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폈다.

/연합뉴스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 변경 장기화 될 듯

업체 측 수정안 미제출에 나주시, 인수위 제시한 공공기여 방안 검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나주 빗가람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 잔여 부지 용도변경이 장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업체 측이 수정안 자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데다 나주시도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공공기여 확보 방안을 들여다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12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2019년 8월 골프장 부지 75만㎡ 중 한국에너지공대(옛 한전공대) 부지로 35만㎡(감정가 806억원)를 기증했다. 전남도와 나주시 등은 기증의 대가로 잔여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업체 측이 요구한 아파트 세대 수가 5328세대에 달하면서 턱없이 부족해진 학교 용지와 공영 부지,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높은 용적률과 층수 등으로 기부 취지는 없어지고 업체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각계에서 비판이 일자 나주시는 전문가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으로 민관자문단을, 시의회도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업체 측의 요구가 적절한지 검증에 나서면서 도시계획안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8기 인수위원회가 현재까지 진행된 계획안을 폐기하고 사전 협상이 가능한 조례를 제정한 뒤 행정 절차를 밟도록 제시했다. 조례는 도시관리 계획상 용도를 변경해준 대신 민간사업자와 '공익적 기여'를 놓고 협의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돼도 이미 행정절차를 진행한 사안에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나주=손영철 기자 yzson@kwangju.co.kr



주민 괴롭힌 생선 약취 마침내 사라졌다

12일 오전 광주시 북구 임동의 한 수산물업체 냉동고에서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부패해 약취를 풍기는 생선을 치우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올 봄 부도가 난 수산물업체의 냉동창고가 약취의 진원지라고 지적하며 민원을 제기 했었다. 연락두절된 업주의 권리 포기로 이날 치워진 수산물 쓰레기는 25t에 달했다.

/나명주기자mjna@

갭투자자 400억대 보증금 가로챌 40대 추적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갭투자' 형태로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챌 혐의로 고발된 40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해 적은 돈으로 집을 잇따라 사들이는 이른바 '갭 투자' 형태로 200여 건에 걸쳐 40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서울·경기권 주민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로부터 전세를 얻은 세입자들은 주택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 개별 피해를 보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조카 학대 사망' 고모 징역 7년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규)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밤과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 B(5)양을 막대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과 12월 B양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거나 벌을 주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2월 14일 구토를 한 뒤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

광주 모 구청장, 성범죄 혐의 고소 당해 수사

광주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이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는 12일 "30대 여성 A씨가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B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이날 초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의 캠프 관계자였던 B씨를 만나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 B씨는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청장에 당선됐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당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A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구청장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구청장 B씨는 "사실무근이다. 고소 내용을 파악한 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